

野 “정부, 김건희 여사 비위는 감싸고 야당에는 사정 칼날”

법사위 국감... 여야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놓고 격돌 국힘 “李, 판례상 뇌물수수죄”... 민주 “檢, 전형적 짜맞추기”

6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대부분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를 거론하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감사의 비위 사실을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

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야당에) 면질척이식 수사, 짜맞추기 수사,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등에 관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결국 두산건설에 50억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가지고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는데 김오수 전 총장이 FIU 금융자료 요청을 반려했고,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몸을 던져 수사를 무마하는 등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장관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검찰수사가 야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치탄압” 프레임은 내세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정치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다.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수사가) 되겠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검사들이 정치수사에 동원되면서 고소고발 사건 등이 처리가 안 된다’는 지적엔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밀어붙이겠다며 검수완박법이 급물살을 탄 이유가 추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

보를 놓고 여야 간 40분간 기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일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전(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한 짓’ 발언을 겨냥, “그 앞에 ‘무엄하다’라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법무부 국정감사의 주질의는 국감 시작 이후 한 시간이 넘어서 시작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거대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

편안에선 빠졌으며 추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출범한 여가부는 12년 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또 종합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사업, 예산 낭비”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규격화를 위해 시행한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사업이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와 재사용이 어려워 사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남·무안·신안) 국회의원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7년동안 40억을 투입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위생과 규격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예산 낭비되고 사업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플라스틱 어상자의 보급률은 겨우 21%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에 사용 중이던 제품이 590만개였던 상황에서 7년 간 40억 예산을 투입

해 461만개를 추가 보급했으나, 2021년 오히려 총개수는 524만개로 줄어들었다. 현장의 어상자 사용률 역시 2015년 17% 대비 7년 동안 4%가 증가했을 뿐이다.

어상자의 회수율조차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수부는 약 5~20%라 주장하지만, 회수와 관리시스템이 부재해서 회수도 어렵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원활하지 않다. 심지어 폐기물처리장에 버려진 어상자도 있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 취지를 살리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업예산 조기확보로 물량공급을 최대한 기간에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은미 “생계·의료급여 ‘바늘구멍’ 여전”

2021~2022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탈락은 4만3329가구이며, 이들의 월 평균소득은 68만1468원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6일 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탈락한 43,329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분석한 결과 해당 가구의 평균소득이 68만1468원에 불과하고 그 중 1인 가구 소득은 생계급여 수급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탈락가구의 74.6%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 탈락 중 60만원 이하 소득은 2만1500가구로 탈락가구의 66.5%에 달하고 있다. 탈락한 1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53만7375원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27.6%에 머물렀다. 이는 생계급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추

정되는 2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는 297가구로 단 0.09%에 불과하다.

가구재산도 1인가구의 경우 3000만 원 이하 재산가액의 가구가 2만3151가구로 62.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평균 재산액은 37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산이 대도시에서 쪽방 전세도 어려운 3,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부양의무기준과 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에서 탈락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가액을 현실화 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 하실분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23억, 26억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